

현대차 노사 협상, 막판 '힘겨루기'

'긴급조정권 발동' 변수에 노조 양면 전략... 계열사 연대 총파업 경고·사측과 실무협상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변수를 만나 막판 힘겨루기 국면에 돌입했다. 노조는 정부가 개입할 경우 다른 계열사와 연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사측과 실무협상에 나서는 등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현대차의 노사 갈등은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된 실무교섭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추이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그룹 계열사 지회지부 대표들을 만나 파업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계열사 노조원들이 연대해 전면 총파업을 하자는 취지였다.

현대차 노조의 이번 결의는 일단협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끌어들이겠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현대차 그룹 지회는 이 회사 주요 계열사 직원 약 10만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 15만명 가량 되는 금속노조원의 3분의 2가 현대차 파업에 동참하는 꼴이 된다. 사실상 금속노조가 파업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금속노조 전체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의 연대파업 전략은 엄



새로운 세상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6 글로벌 모바일 비전에서 참가자들이 전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포일 가능성이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부 개입'을 시사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보인다. 현대차 노조 전략은 정부와 기싸움을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자신들 임금협상에 금속노조가 개입할 경우 파업의 성격이 정치적 행위로 변질된다는 점을 정부에 알렸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심리적 제동을 걸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물론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개입 필요성과 명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 수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상황 전개는 내주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가 오는 11일까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실무교섭에 나서기로 한 만큼 표면상의 갈등은 일단 수면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이에 맞서는 노조의 연대 총파업 등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뉴시스

태풍 '차바' 수해차량 특별점검

현대·기아차, 이달 말까지 무상 서비스 제공

현대·기아차는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본 수해민을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수해 특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7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해 특별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기간 수해 차량의 엔진·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무상 점검하고, 차량을 입고해 수리할 경우 수리 비용의 최대 50%를 할인해 준다. 또 수해 차량을 입고해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대 10일 동안 렌터카 사용료의 50%를 지원한다. 수리 완료 후 무상 세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대·기아차는 부산, 울산 등 특히 큰 피해를 본 지역을 파악해 긴급 구호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생수, 라면 등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해로 인해 수리할 수 없는 차량의 고객이 현대차 또는 기아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월의 기본 판매 조건에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080-600-6000) 및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중금리' 저축은행 16%·캐피탈 18.8%

제2금융권 평균금리 상승... 신용등급 무관 최고 이자율 적용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평균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사들은 중금리 대출상품의 최고 이자율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중금리 대출상품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이 확인됐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자에 대한 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으로 분류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1분기 15.1%에서 올해 2분기 16.0%로 뛰었다. 캐피탈사는 같은 기간 18.3%에서 18.8%로 상승했다. 올 들어 중금리 상품을 내놓은 카드사는 1분기 12.6%에서 12.7%에 소폭 올랐다. 최고 이자율은 신용등급과 연동되지 않았다. 4~10등급에 대한 은행의 최고이자율은 13.0~13.1%로 비슷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최고 이자율은 모든 신용등급이 14.9%, 19.9%로 동일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1등급을 제외한 2~3등급 23.5%, 4등급 26.6%, 5등급 28.0%, 6~7등급 29.0%로 최고 이자율이 20%를 웃돌았다. 8등급은 최고 34%의 고금리를 부과했다. 지 의원은 "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고이자율을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주택담보대출, 2개월 연체에 집 압류 29%"

제윤경 의원 "연체 기간 4개월 이내가 전체 담보권 실행의 49%"

2010년 10년 거주·20년 분할상환으로 5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던 김씨는 지난해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이자 상환을 2달 연체하자, 은행이 아파트 담보권 실행통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성실하게 이자를 갚아왔다는 사실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은행과 협의해 연체금을 갚았지만, 연체되면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은행은 압류를 진행했다.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사례 가운데 김씨처럼 2달 연체 직후에 담보권이 집행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의 80%가 담보권 처리됐다. 특히 2012~2015년 4년간 전체 담보권 실행 사례 중 2달 연체 직후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가 29%, 연체 3~4달 뒤 실행된 경우는 20%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담보권의 약 절반이 연체 기간이 4달 이내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실행된 것이다. 담보처리 대출 중 3분의 2는 은행이 직접 경매하고 3분의 1은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된 뒤 대부분 경매에 붙여진다. 4년간 경매에 넘겨진 주택은 은행권에서만 5만채에 달했다. 담보권이 실행된 주택대출의 43%는

담보인정비율(LTV)이 50% 미만인 무량 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 의원은 "우량한 채권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연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보권 실행보다는 채권을 유지하는 것이 은행 리스크관리에도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민간 AMC가 주택담보대출 원금의 99%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한 뒤 경매로 평균 7%를 남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행이 판 주택담보대출 채권 원금보다 평균 3.4%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은행은 회수가 가능한 주택대출을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결과적으로 은행예금자의 부담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코리아세일페스타 5일
삼성디지털프라자, 판매 43% ↑

삼성 디지털프라자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시작 후 5일 동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품목별로 20~4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냉장고는 지펠 T9000과 푸드 쇼케이스 등이 인기를 끌며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또 세탁기는 29%, TV는 25% 증가했다. 삼성 디지털프라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이해 9월29일부터 33일간 가전 제품과 IT 기기를 포함해 총 12개 품목 26개 모델을 출고가 기준 최대 53%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패밀리 허브와 65형 대형 UHD TV 등 프리미엄 제품까지 행사 품목으로 판매된다. 삼성 디지털프라자는 기존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행사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뉴시스

한진해운 물류대란 '불통' 이 만들어

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발발한 물류대란을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비협조를 강조했다. 전날 국감에서 '선박운항정보를 요청한 적 없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주장과 대치된다. 예기를 종합해 보니 이렇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화주계약서를 요구했다. 한진그룹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꺼려했다. 그렇다고 물류대란의 규모를 예측할 자료가 없던 것은 아니다.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했으면 됐다. 결국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대란은 소통의 부재라는 사실만 드러났고, 애꿎은 한진해운을 믿고 근무했던 직원들과 계약자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